

“남북한 이웃 국가 평화론”

분단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섬나라이다. 지리적 단절뿐만 아니라 세대적 단절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나였던 한반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분단을 기본상황으로 알고 태어난 세대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분단 70년이 넘는 현실 속에서 남북한은 규범상 한 민족, 사실상 두 국가 상태이다.

이제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남북관계 추구만으로는 헤쳐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영구분단이나 전쟁불사론이 고개를 들기 이전에 현 상황을 직시하고 남북한의 평화로운 이웃관계를 재설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단일국가만이 아닌 복합국가 형태의 통일도 포함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앞당기는 일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립하는 방안일 것이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남북한과 그 주민들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남북한 격차로 서로 차별하고 대립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 이것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남북한이 분단 상태로 긴장과 대립을 지속하면서 서로 차별하고 맞서는 한 평화가 정착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비록 남북한이 분단 하에서 전면전이 없는 상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지적 차원의 긴장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이 또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남북한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를 확립해야 한다. 하지만 단일국가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과거지향적인 통일담론만으로는 미래의 통일을 완성할 수는 없다.

통일은 미래에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의 통일론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과거지향의 통일론,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통일하자는 위로부터의 통일론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통일'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지라는 '위로부터의 통일' 이야기 말고 남북한 주민들이 긴 시간 두고 만나면서 새로운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해가면서 통일기반을 만들자는 방향성이다. 민족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남북한 주민 공통성을 창출해가자는 이야기이다.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맹목적인 통일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시대전환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구한다.

1. 남북 관계를 이웃 국가로

우리는 통일을 향한 남북 간 기존 합의와 협력의 틀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남북한 간 선린 우호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적 발언과 행동, 특히 국민의 안위 수호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 우리는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국가 체제와 적대적 대치의 역사를 당장 뛰어넘을 수 없음을 직시한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용을 추구하되 우선 국가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로의 이행과 점진적인 협력 강화의 순차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한다.

2.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

북한이 우리와 경계를 나누는 이웃으로서 대륙과 해양으로 각각 뻗어갈 수 있는 협력과 번영의 기본 상대임을 상기하고 평화번영의 미래를 계속 준비한다.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는 기본 사항임을 촉구한다. 주변국도 남북 상생과 협력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이 연결되는 세계 평화와 문명사적 전환의 이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의 문호를 지속 개방한다.

3. 유능한 안보와 외교 역량 확보

한반도 전체를 중심에 둔 평화번영공동체 수립과 번영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임을 자각한다.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는 일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는 또한 대륙과 해양 세력의 부침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직시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질서 가운데 적극적이고 유연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확고히 한다.